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8606
----------	------

발의연월일 : 2013. 12.

발의자 :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
위원회 위원장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일본 정부가 보이고 있는 군국주의화와 과거사 부정 등의 역사적 퇴행 행보는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이 제2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피해국들인 동아시아 국가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현재 동북아시아의 평화협력유지와 직결된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이 동북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앞서 과거사를 부정하

고, 미화하며,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특히 전시 위안부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명확한 반성과 배상이 있어야 하고,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부정행위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에 대한 미화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탈 의도를 포기해야 한다.

2.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통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의도해서는 안 되며, 특히 우리 정부의 용인과 동의 없이 한반도 내에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국제법상 여전히 전범국가로서 엄연한 일본 평화헌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3. 미합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 행위들이 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국제질서에 반하는 만큼, 미·일 동맹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과정에서 일본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4. 우리 정부는 이러한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일본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을 포함하여 주요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국제 외교 공조에 나서야 한다.

제안이유

일본 정부 내 집단적 자위권 논의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동 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 10월 3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미일 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를 포함한 안보에 관한 법적 토대의 재검토, 방위비 증액, 방위대강 재검토 등의 노력들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그러나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의 노력은 동북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임.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집단적 자위권은 보통국가로서 행사할 명분이 있으나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가해당사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분에 해당하지 안 되고, 최근 일본의 안중근 의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포함한 과거침략에 대한 부정행위 등의 군국주의화, 역사퇴행 행보의 중단과 반성이 있어야 함.

따라서,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명확히 반대하며,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하여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일본이 주변국들과 신뢰를 구축하고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